

수도이전반대결의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04. 7. 6.

발 의 자 : 운영위원장

I. 제안경위

2004.7.6.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위 위원외 8인의 동의로 발의된 수도이전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II. 주문

우리 마포구의회는 현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이전 계획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규탄하고 어려운 경제 현실과 새로운 안보상황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력을 결집해야 할 때 막대한 재정지출과 국론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민적 합의 없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수도이전은 민족적 영원인 통일이지의 후퇴일 뿐 만 아니라 남북 경제교류 확대 및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3.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국민을 호도하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라
4. 천문학적인 수도이전 비용을 경제난 해소와 청년실업 대책에 활용하라
5. 국가적 대사인 수도이전은 사실상의 천도로 반드시 국민적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라

III. 제안이유

- 0 정도 600년 수도 서울은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적 도시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이며 대한민국의 두뇌이자 심장임. 지난 40년 간 고속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울은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고 태평양과 대륙 경제권을 연결하는 세계적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음.
- 0 정부는 이와 같이 한국 국민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온 수도 서울을 배경하고 정치논리에 따른 명분 없는 수도이전 계획으로 이해 당사자인 수도권 주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음.
- 0 따라서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는 38만 마포구민의 뜻을 모아 정부의 비민주적인 수도이전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확고한 반대의지를 표명하고자 함.

IV. 참고사항 : 없음

따로붙임 : 수도이전 반대 결의안

수도이전 반대 결의안

우리 마포구의회는 현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이전 계획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규탄하고 어려운 경제 현실과 새로운 안보상황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력을 결집해야 할 때 막대한 재정지출과 국론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민적 합의 없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수도이전은 역사적 당위성과 목적의 합리성, 이전 절차의 합법성과 시의적 적절성이 있어야 함에도 특정한 시점에서의 정치논리에 따라 일도양단·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심한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정권적 차원에서의 수도이전이 가시화된다면 수도권 황폐화와 공동화 현상을 초래, 엄청난 사회혼란이 유발되므로 수도이전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2. 수도이전은 민족적 영원인 통일의지의 후퇴일 뿐 만 아니라 남북 경제교류 확대 및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수도서울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자 경제공동체 형성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 개성공단지구와 직결되고, 중국 및 시베리아를

비슷한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로 한반도 및 동북아 경제중심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명분 없는 남행천도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정략적 이용에 의한 반역사적, 반민주적 발상으로 이는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통일의지의 후퇴이며 남북 경제교류 확대 및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3.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국민을 호도하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라

정부는 사회적 갈등으로 국론분열이 일고있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현행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 도시를 집중 육성 발전시켜 기능을 분산시키며, 지방대학 육성 및 졸업생 우대 정책을 강화하는 등 자립형 지방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4. 천문학적인 수도이전 비용을 경제난 해소와 청년실업 대책에 활용하라

대선 당시 수도 건설비용이 4조원이면 가능하던 것이 1년만에 46조원으로 제시되고 있고 국토연구원 발주 조사에서는 다시 두세 배가 넘는 95조~12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수도건설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전국의 신도시화 등 대형 국책사업을 남발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천문학적인 막대한 비용으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진 경제살리기와 청년 실업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5. 국가적 대사인 수도이전은 사실상의 천도로 반드시 국민적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라

수도이전은 국가기관 몇 개 옮겨가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중대 변화를 초래하는 문제이다. 행정수반인 대통령과 정부는 나라 전체의 정체성·상징성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등 전통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이전은 반드시 국민적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수도이전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며 정부의 명운이 아닌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사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이전에 따른 갈등과 대립으로 심각한 국론분열이 일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수도이전에 대한 타당성과 득실계산 및 사회적 가치판단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대로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